



발행일 2025년 11월 17일(월) | 발행인 장창열 | SNS 페이스북·인스타그램 ○금속노조 | 편집 선전홍보실 ☎ (02)2670-9507

금속노조 “회계공시·타임오프는 윤석열 잔재”

이재명 정부에 내란 청산 촉구… “노사자율 확대 약속 이행, 시행령 정치 중단해야”



금속노조가 11일 서울 장교동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가 남긴 회계공시제와 타임오프제를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금속노조는 “이 제도들이 노동조합 자주성을 해손하고 노사 자율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반노동 정책”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책임 있는 청산을 요구했다.

이상섭 금속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윤석열은 회계공시와 타임오프를 통해 노조를 ‘부패세력’으로 낙인찍었다”며 “윤석열의 내란에 맞서 싸운 금속노조가 이재명 정부에서도

같은 제도를 마주해야 하는 현실은 내란의 지속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노사자율 확대’를 강조했지만, 말뿐이라면 윤석열 정책의 계승자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홍지욱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이재명 정부의 노동정책이 재벌 눈치를 보는 방향으로 윤석열 시절로 회귀하고 있다”며 “회계공시와 타임오프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노조법 2·3조 개정의 취지가 무의미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노동 현장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현실에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노조활동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의 권리를 확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속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회계공시와 타임오프 폐기는 단순한 제도 개정이 아니라 내란청산의 출발점”이라며 “시행령 정치를 걷어내는 것이 민주의 복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교섭을 회피하는 사용자들을 규제하고, 이후는 노사자율에 맡기는 것이 국제기준”이라며 “헌법이 보장한 단결권과 교섭권을 침해하는 타임오프를 즉각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금속노조는 “회계공시 완전 폐기가 바로 내란청산”이라며 윤석열 정권이 남긴 시행령 정치를 청산해야 진정한 민주의 복원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헌법을 부정하고 노동3권을 무력화하는 타임오프는 폐기돼야 한다”며 “정부는 노조의 손발을 묶는 반노동 정책을 즉각 거두라”고 요구했다.

현중 하청노동자 빼앗긴 7년 “대법원은 단체교섭권 즉각 인정하라”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 2018년 상고 후 7년째 계류

금속노조가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 단체교섭 청구 소송이 2018년 대법원에 송치된 이 후, 7년째 전원 합의체에 심리 중인 상황을 규탄하고 조속한 판결을 촉구했다.

금속노조는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에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의 단체교섭권을 즉각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해당 소송은 원청 현대중공업이 하청지회의 노조법상 사용자 지위에 있으므로 노동조합 활동 보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참여 보장, 총고용 보장 등의 집단적 근로관계 의제에 대해서 하청지회와 직접 단체교섭에 응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원청 현대중공업은 그간 “하청 노동자는 교섭 대상이 아니다” 라며 교섭을 거부해왔다. 그러나 원청은 하청업체에 대한 지배·결정의 위치에 있으며 하청업체 출퇴근, 휴식 시간, 업체 본공 인원, 물량팀 인원과 활용, 임금, 특근까지 모든 것을 지배·결정해왔다.

소송 당사자인 오세일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 비상대책위원장은 “현대중공업 노동자 1만 9천 명이 하청·이주노동자이며 이들이 재계 순위를 끌어 올린 주역”임에도 ‘유령’ 취급을 받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오세일 비상대책위원장은 “2003년 노조 건설 이후 업체 폐업, 조합원 해고 등 탄압이 이어졌다” 라며 “하청지회가 교섭을 통해 성과를 만들 어내지 못하는 상황이 하청노동자들의 노조 참여를 가로막아왔다”라고 지적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지난 8월 국회를 통과한 노조법 2·3조가 원청 교섭을 현실화한 상황에서 대법원이 더 이상 판결을 미룰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노동자들은 “이 판결에 따라 수많은 사내하청, 비정규직,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들이 진짜 사장 원청과 교섭하고 투쟁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 직후 요구를 담은 1,414명 탄원서를 대법원 민원실에 제출했다.

암 환자 20명 발생한 한국니토옵티칼

한국니토옵티칼 백혈병·암 피해자가 20여 명이라는 사실이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금속노조가 11월 1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한국니토옵티칼 역학조사 및 산재 은폐 조사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국니토옵티칼 노동자들은 편광필름을 만들며 각종 유해 물질을 취급한다. 주야간 12시간 맞교대 형태로 수십 종 유기용제를 다량 취급하며 약품을 배합하고 고온 설비에서 편광필름 접착제를 만든다.

니토옵티칼 측 자료에 의하면 2000년 이후 사내 암 피해 노동자 수는 20명에 달한다. 암 피해자 20명 중 발암물질 취급으로 발생하는 백혈병 등 혈액암이 4명, 야간 교대 근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유방암 피해자는 6명에 달했다.

손덕현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니토옵티칼은 암에 걸린 노동자에게 사과하고 치료 보상하라.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며 “유해 물질 취급 노동자들에 대해 뚜렷한 정부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 정부는 외투기업 유치를 위해 법을 너무 관대하게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